

당대 중국 종교정책에 나타나는 권익의 보호와 통제 — 2018년 수정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안승웅*

【목 차】

1. 서론
2. 종교재산의 보장과 통제
3. 종교활동의 보장과 통제
4. 종교인 신분의 보장과 통제
5. 결론

【초록】

본고는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이 집약되어 있는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재산, 종교활동, 종교인 신분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종교권익의 보호와 통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1980년 이래 중국정부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침탈당했던 종교재산을 종교단체로 환원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국정부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종교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종교교역자 양성과 신분등록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종교교역자의 신분보장과 통제를 동시에 구현하려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중국내 반발과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종교교역자의 임명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교역자에 한하여 다양한 신분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은 권익의 보호와 통제 사이를 균형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중국 종교, 종교 사무조례, 종교정책, 종교재산, 종교활동, 종교인 신분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xiong21@hanmail.net)

1. 서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며 소멸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문화대혁명 10년이란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곤 1921년 창당 이래 지금까지 종교를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교정책을 수립해 왔었다.¹⁾ 이는 중국 공산당이 통일전선을 구축함에 있어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31년 중국 공산당은 『中華蘇維埃共和國憲法大綱』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소비에트 정권 영역 안의 노동자·농민·홍군병사 및 모든 프롤레타리아 민중과 그 가족은 민족(漢, 滿, 蒙, 回, 靺鞨, 苗, 黎, 高麗人, 安南人等)과 종교를 불문하고 소비에트 법률 앞에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모두가 소비에트 공민이다.”²⁾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헌법에 종교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³⁾

그런데 공산당의 종교정책은 종교 자체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통일전선이라는 정치적 효용성에 입각한 것이었다. 때문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중국종교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비록 헌법에서 종교 신앙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었지만 종교인의 신분은 보장되지 않았으며 종교활동 또한 제한받았다. 특히 종교활동의 물질적 토대가 되는 종교재산에 대한 권리는 국가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침탈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에 대한 탄압은 1976년 문화대혁명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어 중국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도래하였고 중

1) 중국 헌법 제1장 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노동 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第一章 總綱 第一條 中華人民共和國是工人階級領導的、以工農聯盟為基礎的人民民主專政的社會主義國家。社會主義制度是中華人民共和國的根本制度。禁止任何組織或者個人破壞社會主義制度。)”라 명시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독재로 사회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유일한 정치 주체가 공산당이므로 사실상 중국은 헌법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는 바로 공산당의 역사이며, 공산당의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정책이라 할 수 있다. (中央政府門戶網站, 2018.03.01), http://www.gov.cn/guoching/2014-03/06/content_2630691_2.htm 참조.

2) 在蘇維埃政權領域內的工人、農民、紅軍士兵及一切勞苦民衆和他們的家屬不分種族(漢、滿、蒙、回、靺鞨、苗、黎以及高麗、安南人等)宗教,在蘇維埃法律面前一律平等,皆為蘇維埃公民。『中華蘇維埃共和國憲法大綱』(百度百科, 2018.03.01.),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8D%8E%E8%B9%8F%E7%BB%B4%E5%9F%83%E5%85%B1%E5%92%8C%E5%9B%BD%E5%AE%AA%E6%B3%95%E5%A4%A7%E7%BA%B2/2220346?fr=aladdin> 참조.

3) 중국의 헌법에 나타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이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 더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54年新中國第一部《憲法》：“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宗教信仰的自由。” 1975年憲法：“公民有言論、通信、出版、集會、結社、遊行、示威、罷工的自由，有信仰宗教的自由和不信仰宗教、宣傳無神論的自由。” 1978年的憲法：“公民有信仰宗教的自由和不信仰宗教、宣傳無神論的自由。” 1982年第四部中國憲法：“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宗教信仰自由。任何國家機關、社會團體和個人不得強制公民信仰宗教或者不信仰宗教，不得歧視信仰宗教的公民和不信仰宗教的公民。國家保護正常的宗教活動。任何人不得利用宗教進行破壞社會秩序、損害公民身體健康、妨礙國家教育制度的活動。宗教團體和宗教事務不受外國勢力的支配。”

교계에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신앙인의 급증으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날로 커졌으며, 소수민족문제·외교문제·홍콩·마카오문제·양안문제 등등 중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들 속에서 종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는 더 이상 이전처럼 단순한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중국공산당은 1982년 「關於我國社會主義時期宗教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라는 이른바 19호 문건을 출발점으로 하여 종교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종교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1993년 江澤民은 ‘종교자유방침, 법치방침, 사회주의사회 적응방침’을 내용으로 하는 ‘三句話’를 제시하였다.⁴⁾ 2007년 胡錦濤는 공산당 제17차 대회에서 종교계 인사와 신도들이 경제사회발전에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요구하였다.⁵⁾ 2016년 習近平은 전국종교공작자회의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을 견지하고 지속 발전시킬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종교에 대한 달라진 인식과 정책에는 일관된 것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종교가 복무하여야 된다는 점이다. 중국공산당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수용하였듯이, ‘인민의 아편’이라 폄하되었던 종교를 적극 끌어안은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기존의 종교정책을 반성하면서 종교를 사회주의에 적응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과거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종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정책에 맞게 종교를 통제하려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종교와 관련된 각종 법률과 법규, 그리고 구체적 종교정책들 속에는 종교권익의 보장과 통제라는 채찍과 당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4년에 제정된 이래 2017년 수정되어 2018년 2월에 새로이 시행되는 「종교사무조례」에는 종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종교를 통제하려는 중국정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특색 종교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 종교정책에 나타나는 종교권익의 보장과 통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중국의 종교정책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종교권익과 관련된 핵심사안인 ‘종교재산’, ‘종교활동’, ‘종교교역자의 신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종교정책에 나타나는 권익의 보장과 통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종교재산의 보장과 통제

종교재산은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가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가옥, 구조물, 시설 등을 의미하며, 종교단체가 종교학교나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을 전개해나가

4) 강경구·김경아,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고찰」, 『중국학』, 제61집, 2017.12, pp.5-6.

5) 全面貫徹黨的宗教工作基本方針，發揮宗教界人士和信教群眾在促進經濟社會發展中的積極作用。胡錦濤，「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為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在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中國共產黨新聞網，2007.12.05.)，<http://cpc.people.com.cn/GB/104019/104099/6429414.html> 참조.

는데 있어 물질적 기초가 된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부수립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종교재산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공산당 정권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였지만, 실상은 각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특권을 하나하나 없애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불교와 도교의 경우 토지개혁을 통해 봉건주의적 경제적 특권을 없앴고, 이슬람교의 경우 사원의 종교세 징수권을 박탈하여 경제 및 정교합일적 특권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종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종교조직은 단순한 사회 조직의 하나로 전락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종교단체의 종교 재산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크게 침탈당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첫째, 1949년부터 1957년까지 이른바 사회주의개조시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내 외국인 소유의 종교관련 건물을 접수하여 관리하였고⁶⁾, 정부기관들 또한 교회나 사찰 등과 같은 종교단체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北京 구시가지 소재 600여 불교사원 중 불교의 종교활동장소로 사용되는 곳은 여섯 군데에 불과하고 대부분 사회 각 분야 단체가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하고 있다한다.⁷⁾ 이는 종교를 소멸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사회주의 종교관과 사회의 주요 생산수단과 공공재를 공적소유로 간주하는 사회주의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둘째,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대약진운동기간이다. 이 기간은 반우파투쟁을 겪은 직후여사 좌편향이 더욱 심화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종교단체들은 공산당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종교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야 했다. 외형적으로는 자발적 헌납이었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가권력에 의한 반강제적 침탈이었다.

셋째, 1966년에서 1976년에 이르는 문화대혁명시기이다. 문화대혁명 시기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 없애기[破四舊]' 운동과정에서 수많은 승려들이 사찰에 쫓겨나 강제로 환속당하였고 전국 모든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은 금지되었다. 이때 사찰이나 도관은 역사문화 및 원림 관련 정부기관이 관리하였다. 1983년도 국무원 문건에 의하면 문화대혁명시기 침탈을 당하였던 사찰이나 도관 90% 이상이 원래대로 되돌려지지 않았다.⁸⁾

종교권익에 대한 보호는 바로 이러한 부당하게 침탈당한 종교재산을 환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1981년 최고인민법원과 국무원종교사무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最高人民法院、國務院宗教事務局關於寺廟、道觀房屋產權歸屬問題的複函」은 문화대혁명 시기 침탈당한 종교재산을 종교단체로 귀속시켜야함을 명시하고 있다.⁹⁾ 이밖에 1980년 國務院的 「批轉宗

6)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일찍이 1920년대부터 사당, 사찰 외국인 교회 소유의 토지와 재산은 농민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몰수의 대상이었다.

7) 馮玉軍, 「中國宗教財產之困: 財產所有權歸屬法律無明確規定」(『中國民族報』, 2016.02.18), http://fo.ifeng.com/a/20160218/41552041_0.shtml 참조.

8) 史方平, 「關於佛教寺院宗教財產的若幹問題」(普世社會科學研究網, 2015.07.31), <http://www.pacilution.com/ShowArticle.asp?ArticleID=6007> 참조.

9) “寺廟、道觀不論當前是否進行宗教活動, 其房屋大都是由群眾捐獻而建造. 因此, 除個別確系私人出資修建或購置的小廟, 仍可歸私人所有外, 其它房屋的性質均應屬公共財產, 其產權歸當地宗教團體佛教協會與道教協會所有. 僧、尼、道士一般有使用權, 但均無權出賣、抵押或相互贈送. 任何使用、占用單位或其他機關團體都不能任意改變宗教房產所有權, 產權歸還各宗教團體.” 「最高人民法院、國務院宗教事務局關

教事務局、國家建委等單位關於落實宗教團體房產政策等問題」와 1982년 中共中央書記處的「關於我國社會主義時期宗教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 등의 일련의 문건¹⁰⁾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탈당하였던 종교재산을 종교단체로 귀속시킬 것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교재산의 환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관련규정이 완전하지 못하고 국가의 행정력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하였던 이유도 있었지만 주로 국가권력의 편의주의와 관료의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국가에 귀속된 종교재산이 문화유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행정 관료들은 ‘승려들이 국가문물을 잘 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종교재산의 종교단체로의 환원을 적극 저지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문물 유지보수 경비를 유용할 수 있다. 둘째, 사찰이나 도관 내에 현금함이나 공예품 가게 등을 설치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입장료를 받는다. 넷째, 사찰이나 도관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친인척을 취직시킬 수 있다.¹¹⁾ 즉, 일단 국가에 귀속된 종교재산은 부패한 관료들의 개입으로 인해 종교단체의 재산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법률, 법규 등을 제정하여 종교재산을 보장하려 하였다. 예를 들어 1986년에 제정된 「民法通則」은 제77조에서 “종교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의 합법적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¹²⁾라 명시하였으며, 특히 2004년 「宗教事務條例」가 처음 제정될 당시 중국정부는 종교재산에 대한 규정을 따로 한 장으로 독립시켜 명시함으로써, 이전처럼 종교재산이 쉽게 침탈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宗教事務條例」제5장 종교재산 제3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0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가 합법적으로 사용 중인 토지,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가옥·구조물·시설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과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 재산을 점거, 약취, 사적 분배, 파손 혹은 불법 차압, 압수, 동결, 몰수, 처분해서는 안 되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가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문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¹³⁾

즉, 종교단체의 합법적 재산과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직이나

於寺廟、道觀房屋產權歸屬問題的復函」(法律圖書館,1981.01.27.),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2188 참조.

10) 1983년 國務院的「國務院批轉國務院宗教事務局〈關於確定漢族地區佛道教全國重點寺觀的報告〉的通知」, 1984년 國務院宗教事務局의「國務院宗教事務局復有關宗教團體房屋產權問題」등이 있다.

11) 史方平, 「關於佛教寺院宗教財產的若干問題」, (普世社會科學研究網, 2015.07.31),
http://www.pacilution.com/ShowArticle.asp?ArticleID=6007 참조.

12) “社會團體包括宗教團體的合法財產受法律保護.”(法律圖書館,1986.04.12.),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3633 참조.

13) 第三十條：宗教團體、宗教活動場所合法使用的土地，合法所有或者使用的房屋、構築物、設施，以及其他合法財產、收益，受法律保護。任何組織或者個人不得侵佔、哄搶、私分、損毀或者非法查封、扣押、凍結、沒收、處分宗教團體、宗教活動場所的合法財產，不得損毀宗教團體、宗教活動場所占有、使用的文物。「宗教事務條例」(中央政府門戶網，2006.02.24.)，
http://www.gov.cn/test/2006-02/24/content_210351.htm 참조.

개인이라도 종교활동 장소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전처럼 권력의 편의주의나 군중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해 종교재산이 침탈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종교정책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宗教事務條例」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2017년 새로이 수정된 「宗教事務條例」는 구조례의 미비로 발생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종교재산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5조

공익의 필요에 의해 종교단체, 종교학교 혹은 종교활동장소의 가옥을 수용하려면, 가옥 수용과 관련된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해야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혹은 종교활동장소는 금전으로 보상 받을 지, 가옥재산권으로 교환받을 지, 혹은 재건할 지를 선택할 수 있다.¹⁴⁾

구조례에는 “철거 혹은 이전하려는 자는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종교사무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¹⁵⁾라 규정하여 보상은 ‘협의’의 결과로 진행되는 것에 불과해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수정조례에서는 ‘협의’라는 구절을 빼고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상을 당연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종교재산의 보장이 더욱 명확해지고 구체화 된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종교재산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종교재산에 대한 통제 또한 강화하고 있다. 이는 수정 「宗教事務條例」에서 제시되고 있는 ‘종교재산 회계’ 등과 관련된 조항에서 잘 드러난다. 종교재산과 관련된 회계 사항은 두개 조항을 신설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제58조 종교사무부서는 유관부서와 관련 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는 국가의 유관 재무, 회계제도에 의거하여 회계정산, 재무보고, 재무공개 등의 건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재무관리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재무회계인원을 배치하여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 유관부서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에 대해 재무, 자산검사와 회계감사를 조직할 수 있다.¹⁶⁾

14) 第五十五條：為了公共利益需要，征收宗教團體、宗教院校或者宗教活動場所房屋的，應當按照國家房屋征收的有關規定執行。宗教團體、宗教院校或者宗教活動場所可以選擇貨幣補償，也可以選擇房屋產權調換或者重建。「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참조.

15) 第三十三條：拆遷人應當與該宗教團體或者宗教活動場所協商，並征求有關宗教事務部門的意見。「宗教事務條例」(中央政府門戶網，2006.02.24.)，http://www.gov.cn/test/2006-02/24/content_210351.htm 참조.

16) 第五十八條：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應當執行國家統一的財務、資產、會計制度，向所在地的縣級以上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報告財務狀況、收支情況和接受、使用捐贈情況，接受其監督管理，並以適當方式向信教公民公布。宗教事務部門應當與有關部門共享相關管理信息。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應當按照國家有關財務、會計制度，建立健全會計核算、財務報告、財務公開等制度，建立健全財務管理機構，配備必要的財務會計人員，加強財務管理。政府有關部門可以組織對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進行財務、資產檢查和審計。「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참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의 재무관리가 규범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종교계의 부패를 방지하고 신앙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사무조례」에서는 재무관리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국가 규정에 의거한 회계정산, 재무보고, 재무공개 등의 제도 마련을 의무화하고 나아가 정부 유관부서가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재무, 자산검사와 회계감사를 조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는 소재지의 현급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재무, 수지상황, 기부금 접수 및 사용상황을 보고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신도들에게 알려야 한다.”¹⁷⁾고 명시한 구 조례보다 훨씬 국가의 통제가 강화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히 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고 신도에게 알리는 수준에서 넘어서 전문 재무회계인원을 배치하게 하고 동시에 정부유관부서가 재무, 자산검사와 회계감사를 조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회계를 통한 종교재산의 통제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의 세무등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제59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는 법에 의거해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와 종교교역자는 법에 의거해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세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무부서는 법에 의거해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교역자에 대해 세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¹⁸⁾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역자가 납세인으로서 법에 의거 세무등기를 하고 납세신고를 해야 하고 세무부서는 법에 의거 세수관리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 모든 국가의 국민은 모두 납세의 의무가 있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역자 또한 수입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중국정부는 바로 이러한 원칙을 종교계에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종교재산과 관련하여 권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통제를 실현하려한 것이다.¹⁹⁾

17) 第三十六條：宗教團體、宗教活動場所應當向所在地的縣級以上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報告財務收支情況和接受、使用捐贈情況，並以適當方式向信教公民公布。『宗教事務條例』(中央政府門戶網站，2006.02.24.)，http://www.gov.cn/test/2006-02/24/content_210351.htm 참조.

18) 第五十九條：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應當依法辦理稅務登記。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和宗教教職人員應當依法辦理納稅申報，按照國家有關規定享受稅收優惠。稅務部門應當依法對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和宗教教職人員實施稅收管理。『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참조.

19) 물론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는 비영리조직이고 또한 사회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마련하여 세수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營業稅改征增值稅試點過渡政策的規定」에서는 사찰, 도관, 이슬람 사원 및 교회에서 주최하는 문화, 종교활동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中華人民共和國城鎮土地使用稅暫行條例」에서는 사찰, 도관, 공원, 명승고적 등에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세 면제를 명시하고 있다.

3. 종교활동의 보장과 통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국정부는 1951년에 각급 인민정부 산하에 종교사무처를 설립하였고, 1954년에는 국무원 산하 직속기관으로 종교사무국을 설립하였다. 이는 정부가 종교인의 종교활동까지 통제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교활동은 종교단체가 종교활동 장소에서 주관하는 예배, 설법, 예배, 미사 등과 같은 단체활동 및 선교, 교육, 자선사업 등과 같은 대외적 활동을 일컫는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종교활동은 종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결혼, 장례 등과 같은 특정 예식을 포함하여 일상생활 속 종교적 색채가 있는 모든 풍속, 습관까지 포괄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광범위한 종교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통제하기 위해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 등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등록에 의해 인가된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에서의 종교활동은 보장하며, 이 밖의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종교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제7조

종교단체의 구성과 변경 및 취소는 국가사회단체관리의 유관규정에 따라 등기한다. 종교단체의 회칙은 국가사회단체 관리의 유관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종교단체는 회칙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²⁰⁾

종교단체는 ‘국가사회단체관리의 유관규정에 따라 등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 활동의 근거가 되는 회칙은 국가사회단체 관리의 유관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종교단체는 회칙에 따라 활동해야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종교사무조례」의 이러한 규정은 어떠한 특정 종교가 국가사회단체 관리의 유관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종교단체로서의 자격을 불허하고 법률적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일찍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초기부터 이러한 종교단체의 등기제도를 활용하여 종교활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5대 관변 종교단체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쓴 것을 들 수 있다. 즉, 불교, 도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섯 종교로 한정하고, 각각 중국불교협회(1953년), 중국도교협회(1957년), 중국천주교에국회(1957년),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1951년), 중국이슬람교협회(1952년)라는 관변단체를 만들어 이를 종교사무국 산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였던 것이다. 종교사무국의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는 아래 제8조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제8조

20) 第七條：宗教團體的成立、變更和註銷，應當依照國家社會團體管理的有關規定辦理登記宗教團體章程應當符合國家社會團體管理的有關規定。宗教團體按照章程開展活動，受法律保護。『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종교단체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인민정부의 법률, 법규, 규정 및 정책의 일관된 실천에 협조하며, 신앙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 (2) 종교의 교무를 지도하며 규정과 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감독한다.
- (3) 종교문화 연구에 종사하고, 종교 교의와 계율을 해석하며, 종교사상을 수립한다.
- (4) 종교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종교교역자를 양성하며, 종교교역자를 승인, 관리한다.
- (5) 법률, 법규, 규정 및 종교단체 회칙에 규정된 그 밖의 직능을 갖는다.²¹⁾

즉, 종교단체는 인민정부의 법률, 법규, 규정 및 정책의 일관된 실천에 협조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신앙인의 권익보호, 종교 교무의 지도, 종교 규정과 제도의 제정과 실천, 종교문화 연구와 종교사상의 수립, 종교교육과 훈련 실시, 종교교역자 양성, 종교교역자 승인 및 관리 등과 같은 종교단체의 기능까지 정부가 지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교학교의 등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어떠한 종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해당종교의 교역자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종교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그 자체가 중요한 종교활동 중의 하나라 이야기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일찍이 종교 교역자 양성 단계에서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종교를 사회주의에 적응하게 하고 나아가 종교의 중국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종교교역자의 양성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함을 인지하였던 것이다. 이는 종교학교의 설립과 등록 과정에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제11조

종교학교는 전국적 종교단체 및 성, 자치구, 직할지의 종교단체가 설립한다. 그 밖의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²²⁾

먼저 종교학교는 종교단체만이 설립할 수 있고 그 밖의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교육 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종교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종교단체는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관변 단체이다. 따라서 종교학교의 설립에는 사실상 국가의 종교정책이 관철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종교사무조례」는 아래와 같은 세부절차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제12조

종교학교를 설립하려면 전국적 종교단체에서 국무원 종교사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21) 第八條：宗教團體具有下列職能：(一)協助人民政府貫徹落實法律、法規、規章和政策，維護信教公民的合法權益；(二)指導宗教教務，制定規章制度並督促落實；(三)從事宗教文化研究，闡釋宗教教義教規，開展宗教思想建設；(四)開展宗教教育培訓，培養宗教教職人員，認定、管理宗教教職人員；(五)法律、法規、規章和宗教團體章程規定的其他職能。『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22) 第十一條：宗教院校由全國性宗教團體或者省、自治區、直轄市宗教團體設立。其他任何組織或者個人不得設立宗教院校。『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종교학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서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 국무원 종교사무 부서에 심의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종교사무부서에서는 전국적 종교단체의 신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서 보고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²³⁾

즉, 종교학교를 설립하려면 국무원 종교사무 부서의 심의비준 과정을 거쳐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심의비준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래 제13조 규정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제13조

종교학교의 설립은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명확한 양성목표와 학사규정 및 교과과정의 설치계획이 있어야 한다.
- (2) 양성조건에 부합되는 학생자원이 있어야 한다.
- (3) 필요한 학사운영 자금과 안정된 경비의 출처가 있어야 한다.
- (4) 교육의 임무와 학사규모에 필요한 교육장소와 시설설비가 있어야 한다.
- (5) 학교를 전담하는 책임자와 자격을 갖춘 전임교사 및 내부 관리조직이 있어야 한다.
- (6) 배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²⁴⁾

그리고 제16조에서는 종교학교 교사의 자격검정과 직위평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국무원 종교사무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⁵⁾ 심지어 교과과정에 종교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일정한 정치학습 과목과 프로그램을 이수하게끔 규정하고 있다.²⁶⁾ 즉, 종교학교의 설립과 인허가 등록 과정을 통해 주요한 종교활동인 종교교육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등록을 살펴보자. 종교활동장소 등록에 관한 사항도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종교활동장소는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으로서,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23) 第十二條：設立宗教院校，應當由全國性宗教團體向國務院宗教事務部門提出申請，或者由省、自治區、直轄市宗教團體向擬設立的宗教院校所在地的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提出申請。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應當自收到申請之日起30日內提出意見，報國務院宗教事務部門審批。國務院宗教事務部門應當自收到全國性宗教團體的申請或者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報送的材料之日起60日內，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決定。『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24) 第十三條：設立宗教院校，應當具備下列條件：(一)有明確的培養目標、辦學章程和課程設置計劃；(二)有符合培養條件的生源；(三)有必要的辦學資金和穩定的經費來源；(四)有教學任務和辦學規模所必需的教學場所、設施設備；(五)有專職的院校負責人、合格的專職教師和內部管理組織；(六)布局合理。『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25) 第十六條：宗教院校實行特定的教師資格認定、職稱評審聘任和學生學位授予制度，具體辦法由國務院宗教事務部門另行制定。『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26) 雷斐然，「淺談福建佛學院的思想政治教育工作之道」，『法音』，2017年2期，p.71.

통제는 종교활동을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종교사무조례」 제1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19조

종교활동장소는 사찰, 도관, 이슬람사원, 교회 및 기타 고정된 종교활동장소를 포함한다.

사찰, 도관, 이슬람사원, 교회 및 기타 고정된 종교활동장소의 구분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 종교사무부서에 상신한다.²⁷⁾

종교활동 장소를 사찰, 도관, 이슬람사원 교회 및 기타 고정된 종교활동장소로 분류 한 뒤, 이 구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사무부서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국무원 종교사무부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종교활동장소의 인가를 통해 종교활동장소를 제한하고 자연스럽게 종교활동을 통제하려는 의도이다. 제20조 종교활동장소의 설립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20조

종교활동장소의 설립은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설립취지는 본 조례 제4조, 제5조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다.
- (2) 해당지역 신앙인의 정기적인 집체 종교활동 요구가 있다.
- (3)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교역자나 해당종교의 규정에 부합하는 그 밖의 인원이 있다.
- (4) 소요자금이 있고, 자금의 출처와 경로가 합법적이다.
- (5)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도시계획의 요구에 부합하며, 주변 기관과 주민의 정상적인 생산활동 및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다.²⁸⁾

사찰이나 도관처럼 기존의 종교활동장소가 있더라도 위의 다섯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만 종교활동장소로 인가가된다. 당연히 새로 설립하는 종교활동장소 또한 반드시 등기하여야만 한다.

제22조

종교활동장소는 비준과 조성계획을 거쳐 건설이 완공되면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반드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조직, 규정, 제도, 건설 등의 상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등기를 부여하고, 「종교활동장소등기증」을 발급한다.²⁹⁾

27) 第十九條：宗教活動場所包括寺觀教堂和其他固定宗教活動處所。寺觀教堂和其他固定宗教活動處所的區分標準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制定，報國務院宗教事務部門備案。『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28) 第二十條：設立宗教活動場所，應當具備下列條件：(一)設立宗旨不違背本條例第四條、第五條的規定；(二)當地信教公民有經常進行集體宗教活動的需要；(三)有擬主持宗教活動的宗教教職人員或者符合本宗教規定的其他人員；(四)有必要的資金，資金來源渠道合法；(五)布局合理，符合城鄉規劃要求，不妨礙周圍單位和居民的正常生產、生活。『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중국정부는 이처럼 종교활동장소를 지정, 등록함으로써 종교활동을 통제하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활동의 통제 의도는 종교활동을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거행하여야함을 밝히는 것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제40조

신앙인의 집체종교활동은 일반적으로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거행해야 하고, 종교활동장소, 종교단체 혹은 종교학교에 의해 조직되어야 하며, 종교교역자나 해당 종교 규정에 부합하는 구성원이 주관하되, 교리와 의범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³⁰⁾

신앙인의 단체종교활동은 일반적으로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거행해야한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고 있는데, 이는 가정교회의 급속한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¹⁾ 가정교회는 1958년 가정교회 금지정책, 1965년 4청운동, 문혁시기 4구타파운동 등과 같은 종교적 탄압 속에서도 꾀꾀이 살아남았으며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즉, 비인가 종교활동장소 가정교회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를 공공연히 통제만 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제35조에서 “신앙인의 정기적인 단체종교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종교장소 설립 신청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앙인 대표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소재지 종교단체와 향급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임시활동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³²⁾라는 예외 조항을 두어 가정교회를 양성화하여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 등록을 통하여 종교활동의 통제하려는 중국정부의 의도는 「종교사무조례」 제41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제41조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 비종교활동장소, 비지정 임시활동장소에서는 종교활동을 조직하거나

29) 第二十二條：宗教活動場所經批准籌備並建設完工後，應當向所在地的縣級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申請登記。縣級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應當自收到申請之日起30日內對該宗教活動場所的管理組織、規章制度建設等情況進行審核，對符合條件的予以登記，發給《宗教活動場所登記證》。『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30) 第四十條：信教公民的集體宗教活動，一般應當在宗教活動場所內舉行，由宗教活動場所、宗教團體或者宗教院校組織，由宗教教職人員或者符合本宗教規定的其他人員主持，按照教義教規進行。『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31) 가정교회란 중국정부가 인가하는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기독교협회 이른바 양회 이외의 비인가 기독교단체를 가리킨다. 1951년 초 중국정부의 주도 하에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성립되었고, 이에 많은 신도들이 지하에 숨어들어 자기들만의 종교생활을 이어갔는데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이다.

32) 第三十五條：信教公民有進行經常性集體宗教活動需要，尚不具備條件申請設立宗教活動場所的，由信教公民代表向縣級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提出申請，縣級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征求所在地宗教團體和鄉級人民政府意見後，可以為其指定臨時活動地點。『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거행해서는 안 되며, 종교성 기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 비종교활동장소는 종교교육 및 훈련을 해서는 안 되며, 공민을 조직해 해외에 나가서 종교적 성격의 교육, 회의, 활동 등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³³⁾

즉,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에서의 종교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모두 금지시키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외에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하여 제8장 법률책임 관련 장에서 벌칙조항까지 상세하게 준비하고 있다.³⁴⁾ 그런데 이러한 「종교사무조례」의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신앙의 자유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기관이 만든 조례로써 사법부의 최고의 법을 어기게 되는 위법적 요소까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정부는 왜 이처럼 무리하게 종교활동을 통제하려 하는가? 그것은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여 당과 정부의 통제에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중국 유일의 통치세력인 공산당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집단의 성장은 일당 독재 체제를 위협할 가장 큰 위험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종교와 민중이 결합한 민란은 중국의 역대 통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에 파룬궁 세력이 급속히 성장하자 중국정부는 즉시 제동을 걸고 강력하게 탄압하였던 것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4. 종교교역자 신분의 보장과 통제

일반적으로 종교교역자는 존경의 대상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상황이 달랐다. 일찍이 1919년 5·4 신문화운동 이래 과학을 신봉하는 사조의 영향으로 불교와 도교와 같은 고유 전통종교는 미신의 하나로 치부되었고, 승려나 도사는 경멸이나 차별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서구열강의 중국식민화 정책이 노골화 되면서 천주교나 기독교의 성직자는 서양제국주의 침탈의 척후병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종교교역자에 대한 편향된 관점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이후 더욱 심화되었으며, 문화대혁명시기에는 교역자에 대한 직접적 탄압으로

33) 第四十一條：非宗教團體、非宗教院校、非宗教活動場所、非指定的臨時活動地點不得組織、舉行宗教活動，不得接受宗教性的捐贈。非宗教團體、非宗教院校、非宗教活動場所不得開展宗教教育培訓，不得組織公民出境參加宗教方面的培訓、會議、活動等。『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34) 예를 들어 제69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 종교활동장소가 허가 없이 설립되었거나, 증기가 취소되었거나 등기증서가 말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종교활동을 하거나 허가 없이 종교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종교사무부서에서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금지 명령을 내린다. 위법 소득이나 비합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이 있으면 위법소득과 비합법적 재물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면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 비종교활동장소, 비지정임시활동지점이 종교활동을 조직, 거행하고 종교성 헌금을 받으면, 종교사무부서가 공안, 민정, 건설, 교육, 문화, 여행, 문물 등의 유관부서와 협력해 활동정지 명령한다. 위법소득이나 비합법적 재물이 있으면 위법소득과 비합법적 재물을 몰수하고, 이에 더해 위법소득의 1배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법소득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가 성립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이어지기도 했다. 승려와 도사는 사찰과 도관에서 쫓겨나 강제로 환속해야 했으며, 기독교인은 다시는 종교를 가지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1979년 문화대혁명이 종결되자 절정에 달했던 종교교역자에 대한 탄압은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1982년에 이른 바 19호 문건 발표 후, 종교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사회 역사현상으로서 종교신앙, 종교감정, 종교의식, 종교조직이 모두 실재하는 현상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³⁵⁾ 그리고 이에 따라 종교교역자의 신분에 대한 보장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종교교역자에 대한 신분보장은 우선 문화대혁명기간 폐쇄되었던 종교학교의 복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중국불학원(中國佛學院), 중국기독교남경협화신학원(中國基督教南京協和神學院), 중국이슬람교경학원(中國伊斯蘭教經學院)이 다시 문을 열었으며, 1983년과 1990년에 중국천주교신철학원(中國天主教神哲學院)과 중국도교학원(中國道教學院)이 각각 창설되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종교학교의 숫자는 증가하였고 2011년에 이미 100여 곳에 이르렀다고 한다.³⁶⁾ 그런데 이러한 종교학교를 통해 양성된 예비 종교교역자들은 종교단체의 인가와 종교사무부서 신고라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정식으로 종교교역자의 신분을 획득할 수 있다. 「종교사무조례」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36조

종교교역자는 종교단체의 인가를 거쳐 현금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상신해야 종교교역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 종교교역자자격을 미취득했거나 상실한 자는 종교교역자 신분으로 활동할 수 없다.³⁷⁾

종교교역자는 종교단체의 인가를 거쳐 현금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등록해야 종교교역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면상 종교단체의 인가가 종교교역자 신분확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을 보다 구체화한 「宗教教職人員備案辦法」을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종교사무부서에서 종교단체의 인가과정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살피고, 또한 종교교역자 등록 서류상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사무부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교역자 등록에 있어 중국정부가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티베트불교 성직자 임명과 천주교 성직자 임명이다. 먼저 티베트불교를 살펴보자.

티베트불교는 西藏지역에 전하는 불교라는 의미에서 藏傳불교라 불리며 종교적 스승, 지도자 라마에서 이름을 따 라마교라 부르기도 한다. 이 티베트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적 스승인 라마가 죽으면 다시 어린아이로 환생하여 자신의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교역자 양성은 환생한 어린 스승을 찾는 것, 즉 활불승계라 불리고 있

35) 강경구·김경아,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종교이론의 고찰」, 『중국학』 제61집, 2017.12, p.5 참조.

36) 강경구 외, 『시진핑시대, 중국 종교정책과 신종교사무조례』, 신아사, 2018, pp.79-80.

37) 第三十六條：宗教教職人員經宗教團體認定，報縣級以上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備案，可以從事宗教教務活動。「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7.09.07.)，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다.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은 이러한 활불승계에도 관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0대 판첸라마 趙撲初를 내세워 1987년 티베트불교 관변 교육기관인 中國藏語係高級佛學院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활불 승려들을 모아 강습을 진행하고 티베트 불교의 학위제도인 게세(Geshe)를 본 따 타람빠(拓然巴) 학위를 수여하였다.³⁸⁾ 티베트 불교의 활불승계에 대한 중국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은 종교교역자 양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종교사무조례」는 활불승계를 통해 배출된 종교교역자의 비준까지 명시하고 있다.

티베트불교 활불승계는 불교단체의 지도하에 종교의례와 역사정례에 따라 처리하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나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 비준을 요청한다.³⁹⁾

‘종교의례와 역사정례에 따라 처리하고’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중국정부는 티베트불교의 전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티베트불교 활불승계는 불교단체의 지도하에’ ‘성급이상 인민정부종교사무부서나 성급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등록제인 한전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보다 훨씬 엄격하다. 이는 1959년 라싸봉기와 달리 라마의 망명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도 승려를 중심으로 민족적 저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⁴⁰⁾ 다시 말해 티베트의 활불이 갖는 종교적 권위가 티베트의 민족적 결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이처럼 티베트 불교 종교교역자의 신분 임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천주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관변단체와 그렇지 못한 비인가 단체로 나누어진다. 1957년, 중국공산당의 강요로 ‘中國天主教愛國會’ 등과 같은 관변조직이 결성되자, 이에 반대하는 신도들이 지하로 숨어들어 이들만의 종교를 이어갔는데 이른 바 지하성당이다. 중국천주교애국회와 지하성당의 가장 선명한 차이는 바티칸 교황청과의 관계 문제이다. 중국천주교애국회는 설립당시 중국정부의 삼자, 즉, 자치, 자양, 자전의 원칙을 받아들여 바티칸 교황청의 개입을 배제하였다. 즉, 교황청에서의 주교임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발하였던 것이다. 「종교사무조례」는 이를 공식화하고 있다.

천주교의 주교는 천주교의 전국적 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사무부서에 상신한다.⁴¹⁾

즉, 주교는 중국천주교애국회에서 선발하고 중국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

38) 박노종, 「중국의 종교교육과 종교학교」, 『중국학』, 제61집, 2017.12, p.25 참조.

39) 第三十六條：藏傳佛教活佛傳承繼位，在佛教團體的指導下，依照宗教儀軌和歷史定制辦理，報省級以上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或者省級以上人民政府批准。『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2017.09.07.),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40) 1959년 라싸 봉기로 대표되는 티베트 대규모 저항운동이 1963년에 진압 완료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라싸 봉기 시 약 4만 명이 희생되었으며 이후 티베트 동부 지역에서만 8만 7천 명이 희생되었다 한다. 김재기, 「티베트의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운동의 기원과 전개」, 『대한정치학보』, 제13집 3호, 대한정치학회, 2006, p.43.

41) 第三十六條：天主教的主教由天主教的全國性宗教團體報國務院宗教事務部門備案。未取得或者已喪失宗教教職人員資格的，不得以宗教教職人員的身份從事活動。『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2017.09.07.),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한 이유로 중국정부와 바티칸과의 외교적 갈등이 빚어졌으며, 또 중국은 종교탄압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아야만 했다. 개혁개방 후 중국천주교애국회에서도 중국공산당과 교황청이 관계를 회복하기 희망하였다. 바티칸과 대만 수교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지만, 종교탄압국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중국정부의 입장과 중국내 수많은 신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바티칸의 입장이 맞물려 점차 화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2018년 초에 바티칸 교황청에서는 중국정부가 인가한 주교를 인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⁴²⁾

종교교역자의 신분보장은 위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국가 통치 시스템, 즉 제도권 안에 속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렇듯 통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종교정책을 준수하면, 이전 시기와 다른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보장제도에 종교교역자를 적극 포함시킨 것이다. 2010년 국가 종교국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교교역자는 당의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선전하고 관철하는데 있어서, 신앙인을 단결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종교간 화목을 옹호하는데 있어서, 사회의 화합을 촉진시키는 있어서, 종교와 사회주의가 서로 적응하는 것을 추동하는 방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의 사회보장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여,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없애야 한다. 그들도 병이 들면 치료를 받아야하고 나이가 들면 봉양 받아야 하는데, 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⁴³⁾

2010년 국가 종교국에서 발표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교사무조례」에서는 이를 공식화하고 있다.

제39조

종교교역자는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관련 권리를 누린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는 규정에 따라 종교교역자를 위해 사회보험등기를 처리해야 한다.⁴⁴⁾

즉, 「종교사무조례」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의 종교교역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등기를 의무하고 있다. 사실, 2010년 「종교교역자의 사회보장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 발표되기 전 종교교역자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예를 들어 보험의 경우 직장 보험, 지역 보험이 있는데, 종교교역자는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선 종교활동장소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직장으로 인정될 수 없어 종교교역자는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그리고 종교의 특성 상 한 지역에 계속 머물지 않

42) 「看來, 中梵關係正常化這事, 梵蒂岡這次是真著急了」(觀察者網, 2018.02.07.)

<http://www.haijiangzx.com/2018/0207/1957746.shtml> 참고.

43) 宗教教職人員在宣傳貫徹黨的宗教信仰自由政策、團結教育信教群眾、維護宗教和睦、促進社會和諧、推動宗教與社會主義社會相適應等方面發揮著重要作用。妥善解決好他們的社會保障問題，解除他們的後顧之憂，使他們病有所醫、老有所養，具有重要意義。關於妥善解決宗教教職人員社會保障問題的意見。「關於妥善解決宗教教職人員社會保障問題的意見」(國宗發〔2010〕8號) http://www.gov.cn/test/2006-02/24/content_210351.htm

44) 第三十九條：宗教教職人員依法參加社會保障並享有相關權利。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應當按照規定為宗教教職人員辦理社會保險登記。「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2017.09.07.),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고 자주 지역을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중국 특유의 호구문제로 지역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힘들었다. 2010년 이후 중국정부는 이러한 종교교역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직장보험의 경우 종교활동장소의 법인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보험의 호구문제는 지방정부간 상호연락을 법제화함으로써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교역자가 지역 최저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최저생활보장 여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사무조례」는 종교교역자의 사회보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종교교역자가 안정적인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종교교역자의 신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5. 결론

중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공산당 일당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중국에서종교는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공산당의 정치적 입장과 종교정책에 따라 중국의 종교는 시대별로 부침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통일전선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 종교권익의 보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국가 통치시스템에 입각한 종교권익의 통제이다.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은 권익의 보호와 통제 사이를 균형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성립 전 통일전선이 긴요할 당시 중국 공산당은 종교권익의 보호에 치중하였으며, 사회주의국가 성립 직후부터는 종교권익의 통제로 방향을 바꾸었다.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고 개혁개방이 실시되면서 통제는 느슨해지고 반대로 권익의 보호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최근 종교의 위상이 제고되고 중국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과 종교가 밀접해지자 다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이 집약되어 있는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재산’, ‘종교활동’, ‘종교인 신분’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종교권익의 보호와 통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1980년 이래 중국정부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침탈당했던 종교재산을 종교단체로 환원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4년 처음 제정되었던, 「종교사무조례」에서는 종교재산의 보호를 법률적 차원에서 보다 명확히 하였다. 2018년 시행되는 수정 「종교사무조례」는 달라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하였다. 종교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고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재무관리와 세수관리를 추가하여 종교재산과 관련된 권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통제를 실현하려 하였다.

둘째, 중국정부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종교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경우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천주교애국회,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이슬람교협회 등의 등록된 5대 종교단체만 인정한다. 이 밖의 종교단체와 신생종교단체는 사이비종교단체로 규정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5대 종교단체 산하의 종교학교만 등록을 허가하고 학교의 설립과정에 종교사무국의 정

치적 입장이 합법적으로 개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끝으로 등록된 종교활동장소에서의 종교 활동만을 허가함으로써 종교활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즉, 등록제라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종교활동은 보장하나 이 밖의 종교활동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정부는 종교교역자 양성과 신분등록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종교교역자의 신분보장과 통제를 동시에 구현하려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중국 내 반발과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종교교역자의 임명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교역자에 한하여 다양한 신분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종교단체·종교학교·종교활동장소의 법인화 추구, 호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이전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종교교역자를 사회보장제도의 테두리 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어 안정적인 종교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상에서,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 권익의 보호와 통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을 살펴보았다. 종교가 자유로운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은 종교 탄압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종교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종교의 자유가 확대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개혁개방 및 WTO 가입이후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죽의 장막에 안에서 자신만의 일방적인 통치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는 항상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때로는 비호를 받거나 때로는 탄압을 받는 가운데서 그 종교의 영적 영역을 확대하여 왔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치와의 침예한 긴장관계 속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종교는 그 저항의 힘을 영적 영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는 종교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으로 인하여 중국의 종교는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자유만 누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중국의 종교가 종교다운 종교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구 외, 『시진핑시대, 중국 종교정책과 신종교사무조례』, 신아사, 2017.
- 강경구·김경아,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고찰」, 『중국학』, 제61집, 2017.12.
- 박노중, 「중국의 종교교육과 종교학교」, 『중국학』, 제61집, 2017.12.
- 김재기, 「티베트의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운동의 기원과 전개」, 『대한정치학보』, 제13집 3호, 대한정치학회, 2006.
- 雷斐然, 「浅谈福建佛学院的思想政治教育工作之道」, 『法音』, 2017年2期.
- 胡錦濤,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爲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在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中國共產黨新聞網, 2007.12.05.),
<http://cpc.people.com.cn/GB/104019/104099/6429414.html>
- 馮玉軍, 「中國宗教財產之困: 財產所有權歸屬法律無明確規定」(中國民族報, 2016.02.18),
http://fo.ifeng.com/a/20160218/41552041_0.shtml
- 史方平, 「關於佛教寺院宗教財產的若干問題」(普世社會科學研究網, 2015.07.31),
<http://www.pacilution.com/ShowArticle.asp?ArticleID=6007>
- 「中華人民共和國憲法」(中央政府門戶網店, 2018.03.01.)
http://www.gov.cn/guoqing/2014-03/06/content_2630691_2.htm
- 「中華蘇維埃共和國憲法大綱」(百度百科, 2018.03.01.),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8D%8E%E8%8B%8F%E7%BB%B4%E5%9F%83%E5%85%B1%E5%92%8C%E5%9B%BD%E5%AE%AA%E6%B3%95%E5%A4%A7%E7%BA%B2/2220346?fr=aladdin>
- 「最高人民法院、國務院宗教事務局關於寺廟、道觀房屋產權歸屬問題的復函」(法律圖書館, 1981.01.27.),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2188
- 「宗教事務條例」(中央政府門戶網店, 2006.02.24.), http://www.gov.cn/test/2006-02/24/content_210351.htm
- 「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2017.09.07.),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 「關於我國社會主義時期宗教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1982.03),
<http://www.wutaishanfojiao.com/content-54-150-1.html>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中國宗教, 宗教事務條例, 宗教政策, 宗教財產, 宗教活動, 宗教人身分		
	영문	Chinese Religion, <i>Religious Affairs Ordinance</i> , Religious Policy, Religious Property, Religious Activity, Status of Religious Minister		
<div>Protection and Control of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urrent Policies on Religion in China</div> <div>Ahn, Seung-Woong</div> <p>This paper focuses on <i>Religious Affairs Ordinance</i>, the collection of the religious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examines the protection and the control aspects of the religious rights and interests in terms of three aspects; religious property, religious activity and status of religious minister.</p> <p>First, since 1980, the Chines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olicy of returning the property of religion deprived by the state power in the past. The amended <i>Religious Affairs Ordinance</i> effective in 2018 has reflected the changing situation and added some specific provisions. It has not only supplemented and reinforced the content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property of religion, but added the financial management and tax administration to guarantee rights and interests related to the property of religion and intend to have the efficient control at the same time.</p> <p>Second,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tended to control religious activities efficiently by implementing the registration system for religious institutions, religious schools and places for religious activities. For religious institutions, only five registered religious institutions are allowed; Chinese Buddhism Association, Chinese Taoism Association, Catholic Patriotic Union of China, Chinese Christian Three-Self Patriotic Movement Committee and Chinese Islam Association. In addition, it strongly controls the religious activities by allowing them only in the religious schools and the places of the religious activities under five religious institutions.</p> <p>Third, the Chinese government intends to implement the guarantee and control of the status of religious ministers at the same time by directly and indirectly intervening in the education of religious ministers and the status registration process. In particular, as for Tibetan Buddhism and Catholicism, despite the resistance within China and international condemnation, it is deeply involved in the appointment of religious ministers. On the other hand, the Chinese government is implementing a variety of status assurance policies only for the legally registered religious ministers.</p> <p>In conclusion, the religious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keep a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control of rights and interests.</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안승웅 / 安承雄 / Ahn, Seung-Woong		
	소 속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xiong01@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5월 26일	심 사 일	2018년 05월 30일
	수 정 일	2018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2일